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윤관석 체포안 찬성 139·반대 145·기권 9명 이성만 체포안 찬성 132·반대 155·기권 6명 민주당 의원 대다수 부결 혹은 기권 택한 듯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적나라한 물증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이 정근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한 것이고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다만 형사 사법의 원칙인 불구속수사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은 이정근씨의 녹취록에 있는 수많은 대화 중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혐의를 구성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진술로 메웠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서는 ‘방탄정당’ 이미지 고착화와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해 가결 표를 던져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표결에 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 총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표결에 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 총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된 것은 민주당에서 상당수의 동정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성향의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고려해도 14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 혹은 기권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보고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께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현역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송 후보를 뽑도록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 달라며 300만원씩 돈 봉투 20개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중이던 지난 2021년 3월 중순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

日 오염수 방류 초읽기…2주간 설비 시운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 이달말 마무리

일본 도쿄전력은 12일(현지 시각)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에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지역 방송국인 후쿠시마TV는 11일 도쿄전력이 방사성 물질을 없앤 물을 해수와 섞어 방출하는 방식으로 방류 시설의 시운전을 약 2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6일 원전에서 오염수 방류를 준비하기 위해 바다 밑까지 판 약 1km의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채워 넣었다. 이달 말까지 해당 방류를 위한 설비 측면의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처리수 방출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안전성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 결과물 정리한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관계자들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소마 후타바 일본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경제산업성 니시무라 아스토시 장관을 만나 처리수를 방류하는 정책에 대한 조합원들의 강한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오염수 방류에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의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

정청래 행안위원장 못 맡는다…“선당후사”

野, 최고위원 포함 당직·장관 출신 배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서 전·현직 당직과 고위 정무직 출신은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위원장 자리를 요구해 온 정청래 최고위원은 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정 최고위원은 “선당후사하겠다”며 이번 결정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안을 추진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수와 연구모임 등 다양한 모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을 맡거나 종전 원내대표를 맡은 분

도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는 국회 관례로 이어져 온 것인데 기존 관례 취지는 큰 2개 권한을 동시에 갖게 되면 하나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분산과 균형 차원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원칙을 반영하고 선수와 나이, 지역 특성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상임위원장을 배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행안위원장 내정자였던 정 최고위원도 이번 결정을 받아들였다.

정 최고위원은 의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박광은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의 추진 후 곧바로 나가서 ‘또 선당후사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며 “상임위원장 자리보다 의사결정 과정을 원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32억 부당이익’ 광주 교복 담합, 시의회서 질타

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의 사상 최대 가격담합 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교육청의 미비한 대책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3)은 12일 광주시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교복 담합과 관련해 학부모와 학생 등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4월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근 3년간 160억 원 규모의 교복 입찰에서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모두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광주 지역 교복업체 45곳을 적발하고 입주 31명을 기소했다.

특히, 담합으로 인해 교복 낙찰가가 평균 24% 올라 학생 1인당 최대 1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지원된 입학준비금 85억 원 중 대부분은 교복 구매비용으로 사용된다”면서 “입학준비금 대부분이 업체들을 배 불리는 부당이익으로 전가돼 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보는 것은 결국 학부모지만 이렇다 할 교육청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또 다시 뺨질식 대책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남지역 수소차량 충전소 고작 5곳…보급은 1456대

전남지역 수소차량 충전소가 부족해 친환경 차량 이용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은 전남도 2022년 예산결산 심사에서 수소차량 충전소 구축 확대를 촉구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모두 친환경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전남지역 수소차량은 2019년 27대, 2020년 95대, 2021년 166대, 2022년 533대, 2023년 현재 635대를 보급해 총 1456대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재 전남에서 운영 중인 수소차량 충전소는 5곳에 불과해 보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수소의 보관과 이송 등에 기술력과 투자비용이 소요되지만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불가피하다”며 “친환경 차량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차 충전소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은 원내대표, 위성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대응단장 및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

‘돈 봉투’ 컨설팅 업체 압수수색…“먹사연 자금 정황 포착”

경선 컨설팅 업체 및 관련자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경선 컨설팅을 맡았던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2021년 5월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캠프의 컨설팅을 맡은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이라

고 알려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자금이 경선 캠프로 유입됐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먹사연 자금이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해 컨설팅 업체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먹사연은 통일·복지·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통일부 소관 공익법인이다. 먹사연 자금으로는 캠프 활동을 할 수 없다. 검찰은 가짜 계약을 통해 송 전 대표 캠프 컨설팅 비용을 먹사연이 대납했다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의심한다.

전남 어가 감소에도 청년어가 비율은 증가…완도 가장 높아

2020년 전남 청년어가 전국 52.4%…20년 전 대비 19.2%p↑

전국적으로 어가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기준 전남 청년어가의 비중은 전국 청년어가의 52.4%로 20년 전비율(33.2%) 대비 19.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2일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 인포그래픽을 통해 지난 20년(2000~2020) 전남의 청년어가 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2000년 대비) 우리나라 전체어가 수는 47.1%, 청년어가 수는 86.3% 감소했고, 전남은 각각 42.2%, 78.3% 감소했다.

또 청년어구의 이촌향도 영향으로 전체어가 대비 청년어가 평균 비중

은 2000년 10.8%에서 2020년은 28.8%로 급증했다.

이처럼 매년 어가인구 감소 속에서도 지역별 전체 어가 대비 청년 어가 비중은 2000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한 반면 전남은 33.2%(2000년)에서 52.4%(2020년)로 20년 전 대비 19.2%p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전남 시·군별 전체 어가 비중을 살펴보면, 완도(22.6%), 여수(15.9%), 신안(14.6%), 고흥(10.4%), 진도(6.3%) 등 순으로 높았고, 청년어가 비중은 완도(47.9%), 해남(10.0%), 진도(9.5%), 신안(9.0%), 고흥(6.6%) 순 등으로 컸다. 지난 20년(2000~2020)간 전남 시·군별 대비 청년어가의 비중이 가장 큰 폭으

로 증가한 지역은 완도(23.1%p)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연구원 김태형 부연구위원은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어가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여전히 청년귀어인의 여촌 진입 장벽은 높은 것이 현실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청년어가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 당사자인 청년어업인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신규 정책 발굴을 통해 수산업 활력 제고와 어촌문제 해결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남도는 올해 4월 27일 지역 인구구조를 토대로 청년 지원정책 확대를 위해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청년 나이를 만 45세로 상향했다. /김도기 기자

‘DJ 탄생 100주년’ 김대중재단 18일 창립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서

김대중(DJ)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정치적 고향인 광주·전남에서 김대중재단이 공식 출범한다. DJ 탄생 100주년은 내년 1월 6일이다.

12일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2시 김대중 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창립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광주·전남 김대중재단은 앞서 시·도민들을 비롯, 재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장애인, 정계·학계·경제계·문화예술계 인사 등 320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지난 7일 성황리에 발기인대회를 마쳤다.

이번 창립대회에는 권노갑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김원기, 임재정,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대철 대한민국의회장,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인 김

홍업 재단 부이사장과 3남 김홍걸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지역에서는 정구선 재단설립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김정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상임대표와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안성래·이명자 전 5월 어머니집 관장, 강정재 전 전남대 총장 등 지역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해 창립대회를 함께 할 예정이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군부로부터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당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으로 김 전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을 쌓은 원로성직자 윤공희 전 대주교가 영상 축하 메시지를 전해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는 18일 창립대회에 3000여 명의 시·도민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가수 남진·신형원씨와 코미디언 엄용수씨가 식전 축하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호매민평 이태헌

국힘당의 아이상실

처리수야-괴담이라니까 절대안돼 친구나먹어

나후쿠시마오염 세습180배오염

후쿠시마오염수 방류하면대 일본어민

국힘당 태헌